

< 2024년 관세법령 개정사항 I - 교재순 >

구민희 관세사

- ★ 2024년 1월1일 전까지 개정된 법률 총정리
 - 교재순으로 하였습니다. (기존 기본서를 보면서 개정사항 정리하세요)
- ★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시험전까지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 ★ 출제 가능성에 따른 중요도 표시
개정중요도를 ★/ ★★/ ★★★ 로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세요.
- ★ 개정의 성격을 표시함
 1. 개정내용이 신규법률이면 신설
 2. 개정내용의 내용의 변화이거나 명칭의 변화이면 변경
 3. 개정내용이 기존내용의 정리적 성격이면 정리
 4. 개정내용이 없어지는거면 삭제
 5. 개정내용이 하위법률에서 상위 법률로 위상향되었다면 승격
- ★ 개정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 ★ 2024년 관세사 1차 시험에 반영되는 개정은 제목을 빨간색으로 표시함
- ★ 2024년 관세사 1차 시험과 무관한 개정은 제목을 녹색으로 표시함

● 교재 22페이지 ★ - 관세조사정의 (정리.신설)

7. 관세조사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 교재 30페이지부터 교재 전체 ★ - 명칭변경 (변경) - 2024. 7.1시행

국가관세종합정보망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법 제327조이하 관세정보시스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 한국관세정보원

● 교재 35페이지 ★★ - 서류보관강화 (신설)

<변경 전>

V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변경 후>

V 장부 등의 보관

1. 의의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법 제30조제3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작성 및 보관

상기1.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3. 전자화문서의 효력

상기1.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상기1.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재 105페이지 ★ - 특수관계자 자료제출(정리)

<변경 전>

8.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1) 의의

세관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도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8.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1) 의의

세관장은 관세조사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도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재 145페이지 ★ - 덤프 잠정조치 (정리)

<변경 전>

⑤ 잠정조치 정산

④에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덤프방지관세액이 **잠정덤프방지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프방지관세액이 **잠정덤프방지관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⑤ 잠정조치 정산

④에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덤프방지관세액이 **잠정덤프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프방지관세액이 **잠정덤프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 교재 148페이지 ★ - 덤프 재심사(정리)

<변경 전>

(2) 덤프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① 덤프방지관세 부과 및 약속의 재심사

기획재정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프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2) 덤프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① 덤프방지관세 부과 및 약속의 재심사

기획재정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덤프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프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2. 제54조에 따른 약속

● 교재 151페이지 ★ - 덤프 유효기간 (정리)

<변경 전>

(4) 덤프방지관세의 부과나 수락된 약속의 유효기간

덤프방지관세의 부과나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프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덤프와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변경 후>

(4) 덤프방지관세의 부과나 수락된 약속의 유효기간

덤프방지조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프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덤프와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프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덤프방지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교재 151페이지 ★★ - 우회덤프물품 덤프관세부과 (신설) - 2025.1.1시행

(4)-1 우회덤프 물품에 대한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① 의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에 따라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프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프”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51조에 따른 부과요청을 한 자가 우회덤프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잠정조치 등 적용제외

상기①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우회덤프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3조(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및 법 제54조(덤프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부과시기 제외

법 제55조(덤프방지관세의 부과 시기)에도 불구하고 상기①에 따른 덤프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프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기타

우회덤핑에 관한 조사,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재 162페이지 ★ - 상계 잠정조치 (정리)

<변경 전>

④ 잠정조치의 종결 및 정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되거나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또는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되거나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또는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 교재 166페이지 ★ - 상계 재심사(정리)

<변경 전>

(2) 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상계관세 부과 및 약속의 재심사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와 제60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2) 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상계관세 부과 및 약속의 재심사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조치(이하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계관세의 부과

2. 제60조에 따른 약속

● 교재 168페이지 ★ - 상계 유효기간 (정리)

<변경 전>

(4) 상계관세의 부과나 수락된 약속의 유효기간

상계관세의 부과나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변경 후>

(4) 상계방지관세의 부과나 수락된 약속의 유효기간

상계조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교재 196페이지 ★★ - 용도세율 대상확대(변경)

<변경 전>

2.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나 조정된 잠정세율,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규정에 의하여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나 조정된 잠정세율, **덤핑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규정에 의하여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 교재 197페이지 ★ - 용도세울 용도의 사용 제외 (정리)

<변경 전>

4. 용도의 사용 또는 양도의 제한

용도세울의 적용을 받은 물품은 그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와 당해 물품의 성상이 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4. 용도의 사용 또는 양도의 제한

용도세울의 적용을 받은 물품은 그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재 204페이지 ★ - 품목분류의 수정 (정리)

<변경 전>

1. 품목분류 수정의 의의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1. 품목분류 수정의 의의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아래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1. 별표 관세율표

2. 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및 제76조(일반특혜관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이 품목을 세분하여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

● 교재 208페이지 ★ - 품목분류사전심사 (정리)

<변경 전>

1. 의의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 후>

1. 의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2.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 교재 212페이지 ★★★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설)

12.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상기 7.을 준용하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 교재 213페이지 ★ -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정리)

<변경 전>

3. 변경내용 고시 및 통지

관세청장은 상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품목분류의 심사 및 재심사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3. 변경내용 고시 및 통지

관세청장은 상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 또는 공표**하고, 품목분류의 심사 및 재심사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교재 231페이지 ★ - 세액심사(정리)

<변경 전>

(4) 세액심사

1) 세관심사

① 수입신고수리 후 세액심사 - 원칙적인 심사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
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변경 후>

(4) 세액심사

1) 세관심사

① 수입신고수리 후 세액심사 - 원칙적인 심사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
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 교재 241페이지 ★★★ - 가산세 감면 확대(신설)

<변경 전>

3)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부 면제사유

수정신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금액의 **100분의 20**

나.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금액의 **100분의 10**

<변경 후>

3)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부 면제사유

수정신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금액의 **100분의 30**

나.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금액의 **100분의 20**

다.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초과 1년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금액의 **100분의 10**

● 교재 282페이지 ★★ - 관세부과권 강화(신설)

3.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 ②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 ③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 ④ 법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는 경우

상기 ①부터 ③까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교재 286페이지 ★ - 법률용어순화(정리)

<변경 전>

V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변경 후>

V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교재 297페이지 ★ - 법률용어순화(정리)

<변경 전>

2. 환급절차

(1) 납세의무자가 청구했을 때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1) 납세의무자가 청구했을 때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교재 347페이지 ★ - 사후관리 (정리)

<변경 전>

1. 의의

(1) 세관장에게 제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해당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사유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1. 의의

(1) 세관장에게 제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조약·협정 등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재 349페이지 ★ - 사후관리기관의 위탁 (정리)

<변경 전>

5. 사후관리기관의 위탁

(1) 관세청장의 위탁

관세청장은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한 후 위탁받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1) 관세청장의 위탁

관세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한 후 위탁받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 교재 368페이지 ★ - 납세자권리현장 교부 (정리)

(2) 납세자권리현장 교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권리현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①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환특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 ②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제110조의2에 따른 통합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관세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징수권확보를 위하여 압류하는 경우
 -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 교재 370페이지 ★ - 중복조사금지 (정리)

(2) 중복조사금지

세관공무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 1) (관세포탈 -->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교재 379페이지 ★★ - 과세정보 전송요구 (신설) - 2024. 7.1시행

12.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 전송요구

① 의의

납세자는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로서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납세자 본인
2. 「관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4.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5.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전송

관세청장은 상기①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 철회

납세자는 상기①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④ 거절 또는 중단

상기②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송요구방법

납세자는 상기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①에 따른 전송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아래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송을 요구하는 본인의 과세정보
2. 본인의 과세정보를 제공받는 자
3.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4. 그 밖에 상기1.부터 3.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⑥ 침해금지

납세자는 상기①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기타

상기①부터 ⑥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주기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대행

관세청장은 이 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법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과세정보 전송 업무를 위하여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⑨ 과세정보유출 방지

상기②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상기①(납세자본인은 제외한다)의 자 또는 상기⑧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비밀유지의무

상기②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상기① 각각(납세자본인은 제외한다)의 자 또는 상기⑧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수수료

상기①에 따른 과세정보를 전송 요구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⑧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교재 380페이지 ★★★ -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신설)

<변경 전>

1.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1) 의의

제116조(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 명단공개 제외사유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아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1.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1) 의의

관세청장은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① 체납자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포탈범

법 제270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등의 금액(이하에서 “포탈관세액”이라 한다)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이하에서 “관세포탈범”이라 한다) : 해당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 다만,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재 381페이지 ★ -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신설)

<변경 전>

(5) 관세정보위원회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고 제1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소명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7) 재심의

관세청장은 (4)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

(8) 공개방법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변경 후>

(5) 관세정보위원회

채납자의 인적사항과 **채납액 또는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고 제1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채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소명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채납자 또는 관세포탈범** 명단 공개대상 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7) 재심의

관세청장은 (4)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채납액 또는 포탈관세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채납자 또는 관세포탈범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

(8) 공개방법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8)-1 기타

상기의 규정에 따른 **채납자·관세포탈범** 명단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재 476페이지 ★★★ - 견본품 반출대상 추가 (신설)

<변경 전>

9. 견품반출

(1) 반출허가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직권채취 및 수입신고수리의 의제

① 세관검사 직권채취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변경 후>

9. 견본품반출

(1) 반출허가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직권채취 및 수입신고수리의 의제

① 세관검사 직권채취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또는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 교재 478페이지 ★ - 자율관리보세구역 (정리)

<변경 전>

(4)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감독 및 취소

① 감독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물품의 반출입상황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변경 후>

(4)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감독 및 취소

① 감독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기(2)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에 대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교재 479페이지 ★★ - 보세사 등록 금지 (신설)

<변경 전>

(1) 보세사의 자격

① 일반인

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운영인의 결격사유)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

(3) 등록 금지

(4)에 따라 등록이 취소(**법 제175조제1호에서 3호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2)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변경 후>

(1) 보세사의 자격

① 일반인

법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운영인의 결격사유)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

(3) 등록 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에 따른 보세사 등록을 할 수 없다.

① (4)에 따라 등록이 취소(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75조제1호(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사람

● 교재 493페이지 ★★ - 운영인 결격사유 (신설)

<변경 전>

⑦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변경 후>

⑦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5조의4(보세사 명의대여죄)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 교재 537페이지 ★★ - 유치사유 (신설)

② 유치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㉓에서 ㉕ 현행과 같음.

㉖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교재 569페이지 ★★ - 보세운송통로 (신설)

(2) 기간제한

현행과 같음.

(3) 운송수단의 제한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가 운송수단을 정하여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 교재 570페이지 ★★ - 보세운송특례 (신설)

VI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법 제214조(보세운송신고인)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는 국제항 안에서 제213조제1항(보세운송규정)에 따라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 교재 575페이지 ★ - 보세운송업자 등 행정제재 (정리)

<변경 전>

2. 행정제재

(1) 의의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변경 후>

2. 행정제재

(1) 의의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교재 618~619페이지 ★ - 명칭변경 (변경) - 2024.7.1.시행

정보원 ---> 원산지정보원

● 교재 626~627페이지 ★★ - 손실보상 (변경)

<변경 전>

(2)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의의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상의 기준 등

상기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2)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의의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상의 기준 등

상기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대상 및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재 629페이지 ★★★ - 검사수수료 폐지 (삭제)

<변경 전>

③ 검사수수료

㉔ 검사수수료 납부 제외 보세구역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검사 장소가 보세창고인 경우로서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
2.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

<변경 후>

전체 삭제 - 수출입 전체 검사수수료 폐지

● 교재 688페이지 ★★ - 마약류관련 정보요구 (신설)

(11)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① 의의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 마약류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② 요구

상기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준용

상기 ① 및 ②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4조의6(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을 준용한다.

● 교재 691페이지 ★★ - 위치정보의 수집 (신설)

4-1. 위치정보의 수집

(1) 의의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제241조제1항(일반신고) 및 제2항(간이신고)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2) 준용

상기(1)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보호·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3) 기타

상기(1)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교재 696페이지 ★ - 양벌규정대상 (삭제) - 2024.7.1.시행

(3) 개인의 범위

개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①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 ② 수출(환특법상 수출 포함), 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 ③ 관세사
- ④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 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삭제**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 교재 704페이지 ★ - 허위신고죄등 (변경 및 삭제)

9. 허위신고죄 등(법 제276조)

(1)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현행과 동일

(2)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⑥부터 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부정한 방법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 ㉡ 제12조제1항(제27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 ㉢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제174조제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
- ㉥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제3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 제178조제2항제1호·제5호 및 제2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⑪부터 ⑬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삭제**
- ㉩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자

- ㉔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0조제1항·제4항·제6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0조, 제151조, 제213조제2항 또는 제223조의2를 위반한 자
- ㉕ 제200조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삭제**
- ㉖ 부정한 방법으로 제2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
- ㉗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삭제**
- ㉘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㉙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삭제**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65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재 706페이지 ★ - 과태료 (신설)

(3) 과태료 내용

① 1억원 이하의 과태료

현행과 같음.

② 2억원 이하의 과태료

현행과 같음.

②-1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실로 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㉔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 ㉕ 제200조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㉖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 ㉗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③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현행과 같음

④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㉔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㉕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㉖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한 자
- ㉗ 제327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7.1시행

● 교재 709페이지 ★ - 비밀유지의무위반 과태료 (신설) - 2024.7.1.시행

(5) 비밀유지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의의

관세청장은 제116조제1항·제6항 또는 제116조의6제10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교재 758페이지 ★ -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신설) - 2024.7.1.시행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 한국관세정보원 으로 변경

● 교재 763페이지 ★ - 행정제재 (신설)

3. 행정제재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관세청장은 지정을 받은(이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 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상기 2.지정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다만, 2.(3)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자지정을 받은 경우

(3)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관세청장의 지도·감독을 위반한 경우

(4)-1 관세청장의 지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6. 관세청장의 지도, 감독 - 삭제 (2024.7.1.시행)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게 사업 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6. 관세청장에게 보고 - 2024.7.1.시행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7. 관세청장의 시정명령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업무 수행의 방법, 절차 등이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8. 세부기준

상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교재 765페이지 ★ - 청문 - 2024.7.1.시행

11. 제327조의2제4항 (삭제)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삭제)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교재 769페이지 ★ - 공무원 의제 - 2024.7.1.시행

4.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원의 임직원